



주간통일정세 2011-47(2011.11.14~11.2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4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일, 군부대 식료가공공장 시찰(11/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종합식료가공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1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공장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기초식품직장, 즉석 쌀밥직장 등을 돌아본 뒤 "군인과 인민의 식생활을 더 풍족하게 하는 데서 공장에 맡겨진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장의 생산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데 힘을 넣으라"고 당부
 - 시찰에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 제1부 부장이 수행

- **北김영춘, 중국 고위군사대표단 면담(11/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16일 방북 중인 리지나이(李繼耐) 총정치부 주임이 이끄는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군사대표단과 친선적인 분위기에서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
 - 김 부장과 리 주임은 이날 중국 노래가 포함된 평양시 예술인들의 종합공연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고 방송은 전함.

- **김정일 "朝中군대 혁명적의리 변함없을 것"(11/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7일 중국 군사대표단을 접견하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두 나라 군대와 인민 사이의 혁명적 의리와 계급적 원칙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18일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리지나이(李繼耐) 총정치부 주임이 이끄는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급 대표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양국 군대가 조중친선관계 발전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렇게 말함.
 - 리 주임은 이에 대해 "양국 지도자들 사이의 공동 인식을 관찰하고 두 나라 인민과 특히 군대 간 친선협조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정부, 군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함.
 - 김 위원장이 중국 군사대표단을 위해 만찬을 베풀기 앞서 마련된 이날 접견 행사장에는 북측에서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원홍·박재경 대장(인민 무력부 부부장) 등이 배석

- 중국측은 덩지예(丁繼業) 총후군부 부부장, 천샤오공(陳小工) 공군 부사령관, 왕덩핑(王登平) 해군 북해함대 정치위원, 자오쑹치(趙宗起) 지난(濟南)군구 참모장, 리평산 총정치부 판공청 부비서장, 류홍차이(劉洪才) 북한주재 중국대사 등이 참석

● **김정일 부자, 6556부대 지휘부 공연 관람(11/1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조선인민군 6556군부대 지휘부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했다고 1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위원장은 공연 관람을 마친 뒤 "오늘 공연은 총대와 음악의 결합은 사상과 감정, 혁명과 인간, 투쟁과 생활의 일치이며 우리 선군 위업은 그것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위업이 되는 것임을 실증해줬다"고 말할.
-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 당비서,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제리부 제1부부장, 김원홍·박재경 대장, 윤정린 당중앙군사위원,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이 수행

■ **김정일동향**

- 김정일, 제534군부대 관하 '종합식료가공공장' 시찰(11/14, 중통·중방)
- 김정일, 11.17 '리지나이'(李繼耐/총정치부 주임) 中 인민해방군 고위군사대표단 접견(11/17,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김영남, 11.15 離任 駐北 오스트리아 대사와 담화(11/15, 중통·평방)
- 咸南 흥남가스화 1계열공사·2.8비날론연합기업소 수평방사, 섬유 공정 조업식, 11.17 최영림(내각총리), 전병호(내각정치국 국장), 최태복(黨 비서), 리무영(내각부총리), 곽범기(咸南道黨 책임비서/조업사) 등 참가하 진행(11/17, 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11.16 평양지하상점 가을철상품전시회장 참관(11/17, 중통)
- 김기남(黨 비서), 11.17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비슈와나스')과 담화 및 김정일 선물 인수(11/17, 중통)



나. 경제

● 北, 아시아서 유엔 긴급기금 최대수혜(11/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아시아에서 유엔의 '자원부족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
- 유엔 사무총장이 14일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의 중앙 긴급구호기금(CERF)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북한에 약 1천 500만 달러를 자원부족지원금(underfunded)으로 배정
- 보고서는 자연재해를 입은 국가를 지원하는 긴급대응지원금(rapid response)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긴급구호기금이 북한에 지원한 돈은 약 2천840만 달러라고 밝힘.
- 한편 북한은 최근 6년 간 매년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수혜국 명단에 포함됐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지원금을 배정받지 못함.

● "北 경수로 원전 건설 빠르게 진전"(11/15, 워싱턴포스트(WP))

- 북한이 작년부터 자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도쿄발 인터넷판 기사로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 북한 핵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는 이달 3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 경수로의 외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주장
- 위트는 위성사진을 보면 돔 형태의 경수로 지붕도 바로 옆에 놓여 있어 기중기를 이용해 격납용기가 설치되고 나서 지붕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수로 자체는 6~12개월 이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설명
- 그는 그러나 경수로는 가동하려면 배선, 제어봉 및 핵연료 피복관 설치 등 세부 설비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2~3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봄.
- 작년 11월 북한의 비밀 핵시설을 방문했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경수로 건설 현장을 확인했다면서 당시 현장은 지름 7m의 구덩이에 콘크리트 기초가 전부였다고 전한 바 있는데 불과 1년 만에 격납용기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공사가 진전된 것으로 보여지며, 비록 가동까지 2~3년이라는 시일이 더 필요하지만, 이처럼 경수로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자력으로 원전을 건설할 물자와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고 신문은 평가
- 신문은 이 경수로는 전력 생산에 이용될지, 아니면 핵무기 프로그램의 위장술로 쓰일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경수로를 가진 북한은 현재 이란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설사 이 경수로는 평화적인 목적의 전력 생산에 이용되더라도 25~30mw 규모의 경수로는 외부의 도움이나 국제적 감독 없이 건설되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북한이 원전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지,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지 우려



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북한이 경수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김일성 전 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게 신문은 분석

● **北매체 "온 나라가 수도(평양) 건설 지원해야"(11/16, 조선중앙통신)**

-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 힘쓰는 북한은 16일 수도 평양을 새로 단장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독려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리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가경제기관, 기업소들은 경제작전과 경제조직사업, 보장사업을 짜고들어(조직적으로 벌여) 진행하며 온 나라가 수도 건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또 "수도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은 그 정치·경제적 중요성과 나라의 대외적 권위로 보나, 규모와 긴장한 기일로 보나 전국이 달라붙어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해 빛나게 완성해야 할 대건설사업"이라고 규정
- 아울러 신문은 "모든 수도건설자와 일꾼, 당원, 근로자들은 태양의 성지를 꾸리는 크나큰 긍지와 영예를 안고 수도 건설에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가야 한다"고 독려

● **"北고려항공 평양~쿠웨이트 노선 운항중"(11/17, 자유아시아방송(RFA))**

- 평양과 쿠웨이트시를 오가는 북한 고려항공의 항공기가 여전히 운항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
- RFA는 현지 관계자의 말을 빌려 고려항공이 지난달에도 쿠웨이트시에 취항했고, 이달에도 취항할 예정이라도 전했으며, 쿠웨이트 국제공항 측도 다음달 12일 고려항공의 운항 일정이 있다고 밝힘.
- RFA는 그러나 최근 계약 갱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고려항공의 취항 중단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北 탄광배출 메탄가스도 감축키로(11/18,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탄광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사업계획서를 지난달 5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
- 북한은 사업계획서에서 "연간 2천500만톤의 석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양의 메탄가스를 대기로 직접 방출하고 있다"며 "연간 14만3천톤의 메탄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유엔은 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올해 북한이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해 CDM에 사전고려 대상으로 등록한 8개의 수력발전소 등 9곳 중 7곳에 대한 타당성 검토작업은 끝냄.



- '수해 집중' 北황해도서 국제적십자 재난방지사업(11/18, 미국의소리(VOA))
 - 국제적십자사(IFRC)가 내년부터 북한 황해도에서 재난감소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
 - 프랜시스 마커스 IFRC 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17일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북한 당국이 지금까지 황해남도 재난감소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방침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IFRC는 "재난감소 사업이 실시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피법을 훈련했기 때문에 피해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며 "적십자가 방재시설 건설과 재난대책 수립을 도운 평안남도 매전리는 도 내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이 됐다"고 전함.

- 국제적십자, 北 수재민용 주택 600채 건설(11/18, 러시아소리방송)
 -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이 올 여름 수해가 집중됐던 북한 황해남도 지역에 이재민용 주택 600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소리방송이 18일(현지 시간) 보도
 - 이고르 드미트류크 IFRC 평양사무소장은 최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220만 스위스프랑(약 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황해남도의 수재민 3만 명을 위한 주택 600채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IFRC는 지난 17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당국이 지금까지 황해남도에 대한 재난감소 사업을 허가해주지 않았지만 방침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황해도에서 방재시설 건설, 재난대책 수립, 주민대상 대피법 훈련 등을 포함하는 재난감소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함.

- EU, 北감자 증산연구 추가지원(11/19,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감자 품종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네덜란드 바게닝겐 대학에 북한 과학자 2명이 추가로 유학하게 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9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EU는 최근 지난해부터 3년간 38만유로(약 5억8천만 원)를 지원하기로 한 네덜란드 바게닝겐 대학의 감자증산 연구에 45만유로(약 7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
 - 품종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마텐 용스마 박사는 "EU의 추가 지원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도 10만 유로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북한이 외국의 새로운 농업과학 기술을 자신들의 경험에 접목해 스스로 식량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하겠다"고 말함.



■ 기타 (대내 경제)

- 최영림 총리, 11.13~14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생산실태 현지 요해 및 함경남도 '단천항건설현장'에서 정형 요해(11/16, 중통)
- 대동강돼지공장, "통합자동화체계 도입으로 경영활동 정보화와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 선전(11/14, 중통)
- 인민군 김정관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만수대지구 초고층 살림집 건설투쟁에서 성과 이룩" 선전(11/14, 중방)
- 北, "만수대지구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중요 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새로운 평양 번영기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며, 원림화·수림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양시 단장에 총력' 독려(11/16, 중통·노동신문·중방)
- 北 평양합성가죽공장에서 생산된 "학생용·여행용 가방, 여자구두 등이 인민들 속에서 널리 인기" 선전(11/17, 중통)
- 平南道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의 풍력자원 개발 이용 및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등 연구집단의 신형 '터빈날개' 제작으로 전력생산 기여 격려(11/18, 중방·중통)

다. 군사

● "北, 서해서 폭격기 동원 공대함미사일 시험발사"(11/16, 연합뉴스)

- 북한군이 최근 서해 상공에서 폭격기를 이용해 공대함 미사일을 두 차례 시험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6일 "북한군이 10월과 이달 초 IL-28 폭격기를 이용해 서해 상공에서 해상으로 공대함 미사일을 두 차례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안다"고 밝힘.
- 북한이 발사한 공대함 미사일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안가에 배치된 사거리 40여km의 스틱스(Styx)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보임.
- 군 당국은 북한군이 최근 공중에서 해상으로 공대함 미사일 발사 연습을 강화함에 따라 공중에서 우리 함정을 향해 도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대비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소식통은 "북한군이 IL-28 폭격기를 동원해 NLL 근처 상공에서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NLL 이남에서 작전하는 우리 초계함과 구축함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군 당국이 지상과 함정에서 대공방어체계를 각각 강화하고 있다"고 전함.

● 北 연평도 포격원점에 해안포진지 추가구축(11/18, 연합뉴스)

- 북한이 작년 연평도 포격도발의 원점인 개머리 진지가 있는 황해도 강령군 해안가에 포 진지 수십 곳을 추가로 구축한 것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군의 한 관계자는 18일 "강령군 해안가 일대에 해안포 진지 수십 곳이 새로 구축됐다"면서 "이 해안포는 사거리 12km, 구경 76.2mm로 연평도를 겨냥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북한은 우리 군이 연평도 등 서북도서의 포진지를 '유개화'하는 것처럼 진지에 흙더미를 쌓거나 견고하게 보강하고 있어 유사시 포격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분석
-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서북도서 일원에 전력을 보강하자 북측도 대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고 전함.
- 또 북한은 개머리 진지가 있는 강령군의 한 공동묘지에 최근 수 십여기의 무덤을 새로 조성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정보 당국에 따르면 10여 년 전에 조성된 이 공동묘지는 인근 마을의 적은 가구 수에 비해 그 면적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
- 이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은 남측에서 배율이 낮은 카메라로 관측하면 반원 모양의 포진지로 보여 해안포 진지로 착각하기 쉬우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 무덤들을 새로 구축된 해안포 진지로 추정

라. 사회·문화

- **北주민 대면조사 영상 공개... "자살증가·마약만연"(11/14, 연합뉴스)**
 - 2009년 말 북한에서 화폐개혁으로 주민 생활이 훨씬 피폐해졌고 북한 주민 사이에 마약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는 북한 주민의 증언이 공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보수단체인 선진통일연합(상임의장 박세일)과 (사)북한민주회위원회는 14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 열매 대강당에서 '북한주민(탈북자 포함)의 통일인식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북한 주민 14명에 대한 대면조사 영상을 공개
 - 한 북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화폐개혁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며 "시장, 상점이 다 막히고 많은 사람이 자살했다"고 밝힘.
 - 다른 북한 주민은 "북한의 전 지역에 '얼음(마약을 지칭하는 표현)'이 유통되고 있고 신의주 지역의 간부 자식들은 다 갖고 있다"며 "평성에 큰 장마당이 있는 '행복약'을 판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 전함.
 - 선진통일연합은 이 자리에서 지난 8~9월 여론조사기관 GH코리아(대표 지용근)에 의뢰해 실시한 북한주민(탈북자 포함)의 통일인식 조사결과도 공개
 -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탈북자 524명을 대상으로 통일인식을 조사한 결과 38.7%가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북한의 세습체제를 꼽았으며, 56.7%는 중국의 반대로 통일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 지난 8월 북한 주민 14명을 대면조사한 결과 8명(57.1%)이 북한 사



회가 '매우 불안하다고' 답했다고 71.4%인 10명은 생활형편이 매우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는 전함.

● **北 휴대전화 가입자 80만 명 돌파(11/15, 연합뉴스)**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80만 명을 넘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오라스콤 텔레콤' 보고서를 인용해 15일 전함.
- 오라스콤 텔레콤이 14일 내놓은 '2011년 3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80만9천명임.
- 방송은 지난 6월 말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66만여 명이었고 이후 석 달 사이에 13만4천여 명이 늘어났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90만 명을 넘어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보고서는 현재 고려링크의 453개 기지국을 통해 평양과 14개 주요도시, 86개 소도시, 22개 주요도로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북한 주민의 94%가 휴대전화망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작년 3분기에 시작된 영상통화도 올해 6월 사용량이 4배나 늘었다고 소개

● **北매체, 모든 기사에 SNS 공유서비스 제공(11/15,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5일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기사공유 서비스 대상을 전체 기사로 확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명승지마다에 아이들의 야영소를 세워주시여' 등 이날 게시한 모든 글을 대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NHN의 미투데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요즘 등의 SNS 아이콘을 클릭하면 독자의 SNS에 기사가 바로 실릴 수 있도록 함.
- 특히 우리민족끼리의 지난달 기사와 이 매체에 소개된 조선중앙통신 기사에도 SNS 공유서비스가 적용됨.
- 이 매체가 기사공유 서비스를 확대한 것은 남한 사회를 상대로 선전·선동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쿠웨이트에 北근로자 4천여명 근무"(11/16,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동국가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가 4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
-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쿠웨이트 정부가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지만 현지 관계자들은 대략 4천~5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북한 근로자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쿠웨이트에서 도로, 다리, 발전소 등의 건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정부 관계자도 "쿠웨이트는 북한 고려항공의 유일한 중동지역 취항지이기 때문에 북한 근로자가 많다"며 "북한 근로자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4천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함.

● 北 "우리도 줄기세포 기초연구 활발"(11/20, 우리민족끼리)

- 북한에서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20일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0일자에 실린 "줄기세포와 그 이용전망"이란 기사를 인용, "당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우리나라(북한)에서는 줄기세포에 대한 기초연구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밝힘.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임상연구소 전소미 실장은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에서) 심근경색, 특발성 괴저를 비롯한 폐색성혈관질환, 대퇴골두무균성괴사 등 난치성 질병 치료에 자가골수 줄기세포 이식을 적용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축구대표팀, 11.15 김일성경기장에서 '2014년 월드컵 아시아 3차 C조 예선' 對日戰 1:0 승리 신속 보도(11/15, 중통·중방)
- '조선우표전시관'(03.9 開館, 5,700여종 우표전시)의 규모 등 자랑 및 최근年間 3만7,000여명의 해외동포·외국인 참관 등 선전(11/15, 중통)
- 조선노동당출판사,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98' 출판(11/18, 중통·중방)

2. 대외정세

가. 일반

● 킹 美특사 "北인권 상황은 북미관계 수립에 영향"(11/15, 미국의소리(VOA))

-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는 14일(현지시각) "중국 정부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서명국으로서 탈북자를 북송하지 않고 조약에 따라 이들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
- 킹 특사는 이날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자유 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중국 내 탈북 난민이 겪는 고통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또 "북한의 인권증진은 미국의 정책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며 "북한인권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 수립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함.



- 킹 특사는 특히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처참하며 전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고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기를 원한다"고 강조

● 엘더스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고 싶다"(11/15, 연합뉴스)

- 전직 국가수반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The Elders)' 실무진은 15일 "이산가족이나 남북대화 등 어떤 분야에서든 남북 간 신뢰회복과 관계 진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앤드루 위틀리 정책국장이 이끄는 실무진 3명은 이날 오전 통일부 김기웅 통일정책기획관과 외교통상부 임용순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을 잇따라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고 뉴스는 전함.
- 정부는 엘더스 측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평가하는 한편, 최근 남북 간 비핵화 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동향 등을 설명했으며, 특히 대북정책 원칙과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을 발휘해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남북대화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북측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함.
- 한편, 이날 면담에서 엘더스 측의 남북 정상회담 중재 등의 언급은 없었다고 통일부와 외교부는 전함.
- 다만, 엘더스 측은 이날 면담에 참석한 니클라스 스완스톰 ISDP(안보개발정책연구소) 과장이 엘더스 차원이 아닌 연구소 업무 협의차 방북할 계획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주한 러대사 "가스관 연결 위험 담보"(11/15, 연합뉴스)

-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15일 "북한을 거치는 가스관이기 때문에 우리(러시아)는 관련된 위험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담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브누코프 대사는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상업적 협의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계약서를 맺게 되면 러시아가 2017년부터 가스 공급을 담보한다"며 "상업적 측면에서 꼭 이익이 돼야 가스관 프로젝트 가능하다"고 말함.
- 그는 이어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가스 공급량을 늘릴 것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며 "현재 러시아에서 액화가스가 한국으로 들어오지만 가스관을 통해 가스가 들어오면 소비자 가격을 20~30% 줄일 수 있으니 더 이익이 되는 방법"이라고 강조
- 그는 "러시아는 철도 연결과 북한을 거치는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 추진도 남북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우리(러시아)는 이것이 남북에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대화 정상화, 북한의 공개화(개방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임.



- 리지나이 中해방군 총정치부 주임 방북(11/15, 조선중앙통신)
 - 리지나이(李繼耐)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이 이끄는 중국의 고위급 군사대표단이 15일 전용기편으로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군사대표단에는 덩지예(丁繼業) 총후근부 부부장, 천샤오궁(陳小工) 공군 부사령관, 왕딩핑(王登平) 해군 북해함대 정치위원, 자오쑹치(趙宗起) 지난(濟南)군구 참모장(중장) 리핑산 총정치부 판공청 부비서장 등이 포함됐다.
 - 이날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탑 앞에서 진행된 환영식에는 김정각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류홍차이(劉洪才) 북한주재 중국대사 등이 참석
- 리지나이 방북... "중조친선관계 代이어 발전"(11/15, 조선중앙통신)
 - 리지나이(李繼耐)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은 15일 "전통적인 중조(중북)친선관계는 대를 이어 발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양측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갖고 전통적인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등 공동 관심사를 놓고 의견을 교환
 - 이날 회담에는 북한에서 김 부국장과 박재경 대장 등이, 중국은 리 주임 외 덩지예(丁繼業) 총후근부 부부장, 천샤오궁(陳小工) 공군 부사령관, 왕딩핑(王登平) 해군 북해함대 정치위원, 자오쑹치(趙宗起) 지난(濟南)군구 참모장 등이 참석
- 美재무부 "북한 돈세탁·테러자금지원 위험국"(11/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지난 15일 '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차단 안내문'을 발표하고 미국 내 금융기관에 북한을 비롯한 12개국과 거래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함.
 - 재무부는 "북한이 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재무부 발표는 경제협력기구(OECD) 금융활동대책반이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한 성명에 따른 것이라고 뉴스는 전함.
- 오바마 "北의 핵확산에 엄중히 대응" 경고(11/17,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핵확산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 방문 이틀째인 이날 의회 연설에서 국가나 다른 비(非) 국가 단체에 대한 북한의 핵물질 이전은 미국과 우방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
 -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어떤 핵확산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이어 그는 한반도 긴장완화에서 핵확산 차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이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왔다면서 오관을 피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군사 대화 확대를 포함해 보다 긴밀한 중국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

● IAEA "북한 핵계획 여전히 우려사안"(11/18, 미국의소리(VOA))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개발 계획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
- IAEA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17일 열린 정기 이사회 개회사에서 IAEA가 2009년 4월 이후 북한에서 핵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밝힘.
- 아마노 총장은 북한 핵개발 계획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만 갖고 있다며 IAEA가 북한 핵개발 계획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
- 그는 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의 의무와 핵확산금지조약을 모두 이행하고 IAEA에 즉각 전면 협조할 것을 촉구

● 시진핑, 北 청년우호대표단 접견(11/18, 신화통신)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17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북한의 청년우호대표단을 접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8일 보도
- 시 부주석은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의 이용철 제1서기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만나 중국 방문을 환영했다고 통신은 전함.
- 시 부주석은 "수교 60여년을 맞은 중국과 북한은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면서 우호 관계와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왔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공헌해왔다"고 강조
- 시 부주석의 북한 대표단 접견에는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이 배석

● 北, 남수단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1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 7월 분리 독립한 신생국인 남수단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 중앙통신은 김혁철 에티오피아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16일 에티오피아 덩 알로르 쿠을 남수단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코뮌니케(공동성명서)에 서명했으며 양국은 이로써 이날부로 국교를 수립했다고 전함.
- 남수단은 북부수단과 종교·인종 갈등으로 내전을 치르는 등 갈등을 겪다가 지난 7월9일 공식적으로 분리 독립했으며 한국과는 독립 전날인 7월8일 수교 의정서를 교환



● 북한 유네스코대사, 美 대북정책 비난(11/18, 로이터통신)

-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주재 북한대표부의 윤영일 대사가 18일 (현지시간) 북핵 6자회담과 관련, 미국이 협상재개 조건을 명령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고 뉴스통신 로이터가 보도
- 윤 대사는 이날 프랑스 남부 툴루즈의 한 대학에서 100여명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설을 통해 "북한의 모든 불안정이 미국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함.
- 그는 "우리의 불행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나온다"면서 북한 주변에 중국·러시아·미국과 같은 핵 강대국들이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핵 억지력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
- 그는 "우리의 핵 야망은 핵 억지력을 갖는 것"이라며 "이 핵 억지력이 우리에게 평화적 해결방안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 논평】 IAEA의 '北-이란 핵협조' 제기에 대해 "反北 제재소동을 합리화하고 조선반도에 조성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불순한 범죄적 기도의 발로"라고 反撥(11/18, 중통)
- 北-南수단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11.16 에티오피아에서 '공동코무니케'(駐에티오피아 김혁철-아로프 쿠올 땡' 대사 서명) 발표(11/18, 중통·중방)
- 조영만 나미비아 駐在 北대사, 11.9 駐在國 수상 의례방문(11/18, 평방)
- 訪北 '리지나이'(中 軍총정치부 주임)의 '중조친선관계 始終一貫 및 관계발전 노력' 등 강조 언급(11/18, 중통)
- 北, 제19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수뇌자회의가 1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됐다고 간략 소개(11/19, 중통)
- 美國의 유네스코 운영자금 기부 중지(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가입 항의)관련 "달려주머니를 압박수단으로 삼아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려는 위험한 장난"이라고 비난하며 "대세의 흐름에 따를 것" 강조(11/20, 중통·노동신문)

3. 대남정세

● 정부 '경수로 손실 18억9천만 달러' 北에 요구키로(11/14, 연합뉴스)

- 대북 경수로사업 청산작업을 진행 중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조만간 북한에 경수로 사업 종료에 따른 손실비용 18억 9천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정식 요구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는 북한이 지난 9월 "경수로 사업중단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58억 달러를 물어내라는 취지의 서한을 KEDO 사무국에 보낸데 따



른 KEDO 차원의 공식 대응이라고 뉴스는 전함.

- 정부 당국자는 14일 "KEDO 측은 경수로 사업이 공식 종료된 2006년부터 매년 북한에 합의위반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면서 "그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의 돌연한 배상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적반하장식 논리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KEDO 차원의 공식 답신을 보낼 방침"이라고 말함.
- 현재 우리 정부는 KEDO 측에 분담금 1조 3천744억 원과 이자 9천2억 원이 물려 있는 상태이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사업종료의 책임이 북한에 있으며 사업비 18억 9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서한을 보내왔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함.

● 北어린이 100만 명 접종 간염백신 지원(11/15, 연합뉴스)

- 최근 유엔 기구를 통해 1년 만에 대북지원을 재개한 정부가 북한 어린이 100만 명 이상에게 접종할 수 있는 B형 간염 예방백신도 최근 지원을 완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단체인 독일카리타스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이달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10억6천만 원 상당의 B형 간염 예방백신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힘.
- 통일부 관계자는 "물품은 인천에서 배를 통해 중국 단둥을 거쳐 다시 육로를 통해 신의주에 전달됐다"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예산을 활용해 북한에 간염백신을 지원해왔고 이번에도 복지부 예산이 사용됐다"고 말함.
- 통일부는 "이번 사업은 5·24조치 틀 내에서 순수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

● 6·15북측위 "개성서 서해평화 토론회 하자"(11/15, 연합뉴스)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이달 하순 개성에서 하자고 남측위원회에 제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측위는 지난 11일 남측위 학술본부, 언론본부, 청년학생본부 등에 각각 팩스를 보내 "오는 11월 하순 합의되는 시기에 개성에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북남공동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북측위는 "토론회는 북과 남의 학술, 언론, 청년학생대표들이 엇바꾸어 가면서 토론을 진행한 다음 공동문건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하였으면 한다"고 제안
- 북측위는 "지금 이 땅 위에는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서해에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남공동선언의 가치를 들고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 북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해소하며, 민족의 화합과 평화, 통일기운을 고조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밝힘.



- 이와 관련, 북측위의 제안은 오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주년을 앞두고 서해 평화 문제를 매개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뉴스는 밝힘.

● 개성공단 北근로자·생산액 사상 최고(11/16, 연합뉴스)

-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수와 월 생산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는 4만8천242명이며, 이는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한 이후 사상 최다 수준임.
- 월 생산액도 9월 말 기준으로 3천682만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으며, 전달의 3천531만 달러보다 4.3% 증가함.
- 개성공단 월 생산액은 지난 2월 한 달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 3천만 달러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의 남측 기업이 운영하고 있음.

● 北 "내륙경협 南업체 자산도 몰수 가능"(11/18, 연합뉴스)

- 금강산관광특구 내 남측 재산을 몰수한 북한이 특구 이외 내륙지역 경협업체가 투자한 자산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지난해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사업중단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개성 근처에서 모래채취 사업을 해온 CS글로벌도 지난달 초 개성에서 만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사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를 받음.
-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투자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대북 경협사업자의 방북을 선별적으로 허용해왔으며, 북측은 이들 업체에 사업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과 함께 '계약 파기'를 언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려고 경협사업자들에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 사례가 있지만 아직 금강산관광 지역처럼 남측 자산을 몰수하거나 계약파기를 실행에 옮기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전함.

■ 기타 (대남)

-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채택(5.31/상임위 정령 제1673호) 이후 '6월~11월 사이 수많은 외국손님들이 금강산을 찾고 있다'고 선전(11/17, 중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정부 '경수로 손실 18억9천만 달러' 北에 요구키로(11/14)

- 대북 경수로사업 청산작업을 진행 중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조만간 북한에 경수로 사업 종료에 따른 손실비용 18억 9천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정식 요구하기로 했음.
- 이는 북한이 지난 9월 "경수로 사업중단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58억 달러를 물어내라는 취지의 서한을 KEDO 사무국에 보낸데 따른 KEDO 차원의 공식 대응임.
- 정부 당국자는 14일 "KEDO 측은 경수로 사업이 공식 종료된 2006년부터 매년 북한에 합의위반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면서 "그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의 돌연한 배상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적반하장식 논리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KEDO 차원의 공식 답신을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음.
- 이 같은 대응 방침은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열린 KEDO 집행이사회 차석대표 회의(의장 권원직 외교통상부 북핵협상과장)에서 정해졌음.
- 대북 경수로 사업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0mw(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를 북한 신포에 제공하는 프로젝트(총 사업비 42억 달러)이지만 2002년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면서 KEDO 원전공사가 중단됐고 2006년 5월31일 사업이 공식 종료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음.
- 우리 정부는 KEDO 측에 분담금 1조 3천744억 원과 이자 9천2억 원이 물려 있는 상태이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사업종료의 책임이 북한에 있으며 사업비 18억 9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서한을 보내왔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 북한은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다가 지난 9월8일 경수로사업국 명의의 서한을 주유엔 대표부를 통해 데이비드 윌러스 KEDO 사무총장에게 보냈음.
- 서한은 종료사업의 책임을 KEDO에 있으며 직접 손실액 58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북한이 요구하는 58억 달러에는 직접 손실액에 더해 기회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앞으로 재개될 북핵 6자회담에서 경수로 제공 문제를 본격 거론하기 위해 사전정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음. KEDO 집행위는 내년 초 수석대표 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청산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 관련 대응방향을 논의할 방침임.



● <정부, '北경수로 건설 진척'에 촉각>(11/16)

-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에 건설 중인 경수로 공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북한이 건축 구조물이 아닌 원자로를 제작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지만 실제 경수로가 건설되면 정부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경수로 건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정부와 미국 등이 모두 인지하는 내용"이라면서 "남북·북미대화도 이런 경수로 건설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시작돼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건축 구조물 건설과 원자로 제작 능력은 별개"라면서 "지금은 외벽 공사가 진전된 것이고 북한의 원자로 제작 능력은 여전히 의문사항"이라고 지적했음.
- 북한은 2009년 4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해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경수로 건설 의지를 밝혔음.
- 이어 지난해 말 방북한 지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등을 통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영변에 100MW급 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 북핵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경수로 건설이 현실화될 경우 "영변의 기존 5MW 실험용 원자로보다 더 큰 고민거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평화적 핵이용"이라고 북한이 주장하지만 경수로 가동을 위해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면 핵무기 관련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임.
- 정부도 북한의 의도를 주시하고 있음.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건설 중인 경수로의 실제 전기출력은 25~30MW로 알려졌다"면서 "실제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인지 연구목적인지 등은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음.
-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2차 북미대화 때 북한이 미국에 경수로 제공을 요구했다는 관측과 맞물려 이번 경수로 건설이 협상의 '판돈(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 등에 따른 보상)'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옴.
- 북한은 현재 핵 관련 시설로 5MW 실험용 원자로와 1965년 구소련이 영변에 건설해준 IRT-2000 원자로, 재처리 방사실험실, 핵연료가공공장 등 4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오바마 "北의 핵확산에 엄중히 대응" 경고(11/17)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핵확산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 방문 이틀째인 이날 의회 연설에서 국가나 다른 비(非) 국가 단체에 대한 북한의 핵물질 이전은 미국과 우방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어떤 핵확산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 대응"할 것이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국방예산 삭감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감소로 이어지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태평양지역의 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다짐했음.
 - 그는 이라크 등의 전쟁이 끝남에 따라 군사적 최우선 순위를 아·태지역에 두라고 국가안보팀에게 지시했다면서 미국은 태평양지역의 강대국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인권문제를 포함해 이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야기하겠지만,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평화롭고 번영한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이해에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미국은 이를 환영하는 이유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한반도 긴장완화에서 핵확산 차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이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보아왔다면서 오관을 피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군사 대화 확대를 포함해 보다 긴밀한 중국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민의 보편적 인권 존중과 국제규범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솔직한" 대화를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바마 대통령은 9일간의 아·태 순방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호주 방문은 취임 후 처음임.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 방문에 이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동아시아정상회담(EAS)에 참석할 예정임.

● 원자바오 "6자회담 조속 재개 희망"(11/18)

-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와 만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 원 총리는 이날 발리 누아보아 컨벤션센터에서 20분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북미 간, 남북 간 대화가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6자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 원 총리는 또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초청한다고 얘기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공식 요청했음.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내년이 한중수교 20주년이고 여수 엑스포도 열리고 한국방문의 해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음.
-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핵안보 정상회의에 후 주석의 참석을 공식 요청했으며, 원 총리는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최 수석은 밝혔음.



나. 미·북 관계

● 킹 특사 "北인권 상황은 북미관계 수립에 영향"(11/15)

-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는 14일(현지시각) "중국 정부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서명국으로서 탈북자를 북송하지 않고 조약에 따라 이들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음.
- 킹 특사는 이날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자유 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중국 내 탈북 난민이 겪는 고통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또 "북한의 인권증진은 미국의 정책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며 "북한인권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 수립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킹 특사는 특히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처참하며 전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고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 美재무부 "북한 돈세탁·테러자금지원 위험국"(11/17)

-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지난 15일 '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차단 안내문'을 발표하고 미국 내 금융기관에 북한을 비롯한 12개국과 거래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했다.
- 재무부는 "북한이 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 발표는 경제협력기구(OECD) 금융활동대책반이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한 성명에 따른 것임.
- 경제협력기구 금융활동대책반은 성명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금융체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금융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음.

다. 중·북 관계

● 리지나이 방북... "중조친선관계 代이어 발전"(11/15)

- 리지나이(李繼耐)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은 15일 "전통적인 중조(중북)친선관계는 대를 이어 발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음.
- 중국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이날 평양을 방문한 리 주임은 북한군 총정치국이 마련한 환영만찬 답사에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한 노동당 영도 밑에 조선군대와 인민이 국가건설 위업 수행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은 환영사에서 "조선과 중국 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조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7월1일)을 뜻 깊게 기념한 올해 인민해방군 고위군사대표단의 방문으로 양국 군대



간 친선이 높은 단계로 추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양측은 앞서 고위급 군사회담을 갖고 전통적인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등 공동 관심사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음. 이날 회담에는 북한에서 김 부국장과 박재경 대장 등이, 중국은 리 주임외 덩지예(丁繼業) 총후근부 부부장, 천샤오궁(陳小工) 공군 부사령관, 왕딩핑(王登平) 해군 북해함대 정치위원, 자오쥙치(趙宗起) 지난(濟南)군구 참모장 등이 참석했음.

● 北김영춘, 중국 고위군사대표단 면담(11/17)

-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16일 방북 중인 리지나이(李繼耐) 총정치부 주임이 이끄는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군사대표단과 친선적인 분위기에서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했음.
- 중앙방송은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양국 간 군사교류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임. 김 부장과 리 주임은 이날 중국 노래가 포함된 평양시 예술인들의 종합공연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음.

● 시진핑, 北 청년우호대표단 접견(11/18)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17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북한의 청년우호대표단을 접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8일 보도했음. 시 부주석은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의 이용철 제1서기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만나 중국 방문을 환영했음.
- 시 부주석은 "수교 60여년을 맞은 중국과 북한은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면서 우호 관계와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왔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공헌해왔다"고 강조했다.
- 시 부주석은 이어 "최근 몇 년 새 양국의 공동 노력 속에서 공산당과 노동당의 고위인사 교류가 여러 차례 이뤄졌고 각 영역에서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져 양국 관계에 생기와 활력이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시 부주석은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과 더불어 전통을 잇고 미래지향적인 우호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고 촉진하고자 한다"고 역설했음. 시 부주석은 아울러 "청년은 국가의 미래이자 양국 우호관계의 계승자이고 건설자"라면서 "중국과 북한의 청년 조직이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가는데 공헌하라"고 주문했음. 시 부주석의 북한 대표단 접견에는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이 배석했음.

● 김정일 "朝中군대 혁명적의리 변함없을것"(11/18)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7일 중국 군사대표단을 접견하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두 나라 군대와 인민 사이의 혁명적 의리와 계급적 원칙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18일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리지나이(李繼耐) 총정치부 주임이 이끄는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급 대표단의 예방을 받은 자



- 리에서 "양국 군대가 조중친선관계 발전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 리 주임은 이에 대해 "양국 지도자들 사이의 공동 인식을 관철하고 두 나라 인민과 특히 군대 간 친선협조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정부, 군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이 중국 군사대표단을 위해 만찬을 베풀기 앞서 마련된 이날 접견 행사장에는 북측에서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원홍·박재경 대장(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배석했음.
 - 중국측은 덩지예(丁繼業) 총후근부 부부장, 천샤오궁(陳小工) 공군 부사령관, 왕딩핑(王登平) 해군 북해함대 정치위원, 자오쥙치(趙宗起) 지난(濟南)군구 참모장, 리평산 총정치부 판공청 부비서장, 류홍차이(劉洪才) 북한주재 중국대사 등이 참석했음.

라. 일·북 관계

● <평양서 열린 北-日 축구.. "화해는 없었다">(11/15)

- 15일 북한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 3차 예선 북한-일본전(북한 1-0 승리)에 쏠린 일본의 관심은 작지 않았음.
- 북한을 꺾고 아시아 최종예선에 나가고 싶은 것은 물론이고, '축구 외교'를 통해 냉랭해진 북한과의 관계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기 때문임. 특히 북한이 일본 선수단 외에 응원단 약 150명과 취재진의 방북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기대가 더욱 고조됐음.
- 하지만 14일 베이징을 거쳐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한 일본 응원단이 부딪친 것은 북한 당국의 냉랭한 대접이었다. 북측은 일본 응원단이 가져간 일장기와 호루라기, 플래카드 등의 경기장 반입을 금지했음. 심지어 응원단이 입고 간 일본 대표팀의 유니폼과 사진기도 압수했음. 유니폼에 일장기가 새겨져 있다는 이유였음.
- 응원단뿐만 아니라 일본 선수들도 통관 검사를 이유로 약 4시간 동안 공항에서 발이 묶였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한 정부 관계자는 "9월에 일본에서 열린 (1차) 예선 때에도 경제 제재라며 우리 선수들의 짐을 엄격하게 검사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음.
- 일본 응원단이 관중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 경기를 지켜보는 동안 5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을 가득 메운 평양 시민들은 각종 깃발을 흔들고, 메가폰과 북을 이용해 마음껏 응원전을 펼쳤음.
- 북한 응원단은 한글로 '조선 이겨라'라고 쓴 카드 5장을 들고 카드섹션을 펼쳤고, 경기장에 일본 선수들이 들어서자 사방에서 야유를 퍼붓기도 했음. 북한 선수들이 일본 골문을 위협하면 귀청을 찢을 듯 한 성원이 일어났음.



- 이미 최종예선 진출이 좌절된 북한이 '홈그라운드에서 일본에 질 수는 없다는 자존심 하나로 전력을 다했다면, 이미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할 일본은 타지키스탄전에 나선 선발 선수 중 6명을 벤치 멤버로 바꾸는 여유를 보였음.
- 결과는 1-0 북한의 승리로 끝났고, 일본 응원단은 자국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탑 등 평양 시내를 둘러본 것으로 만족해야 했음. 사진을 찍지 못하는 대신 가져간 공책에 평양 시내 풍경을 그려넣은 이들도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日민간단체, 탈북자에 첫 일어교육(11/15)**

- 일본의 민간단체인 '북조선 난민 구원기금'이 일본 내 탈북자들에게 일본어 교육을 시작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했다. 이 단체의 카토 히로시 대표는 RFA에 올여름부터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3차례 일본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본어 강좌에는 16세부터 60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탈북자 2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정착한 탈북자는 200여 명임.

마. 기 타

● **엘더스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고 싶다"(11/15)**

- 전직 국가수반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The Elders)' 실무진은 15일 "이산가족이나 남북대화 등 어떤 분야에서든 남북 간 신뢰회복과 관계 진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 앤드루 위틀리 정책국장이 이끄는 실무진 3명은 이날 오전 통일부 김기웅 통일정책기획관과 외교통상부 임웅순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을 잇따라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었음.
- 정부는 엘더스 측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평가하는 한편, 최근 남북 간 비핵화 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동향 등을 설명했다.
- 정부는 특히 대북정책 원칙과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을 발휘해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남북대화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북측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음.
- 이날 면담에서 엘더스 측의 남북 정상회담 중재 등의 언급은 없었다고 통일부와 외교부는 전했다. 엘더스 측은 최근 보도된 방한 직후 방북 계획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통일부가 설명했다. 이들은 본부가 있는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 방한 결과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만, 엘더스 측은 이날 면담에 참석한 니클라스 스완스톰 ISDP(안보개발정책연구소) 과장이 엘더스 차원이 아닌 연구소 업무 협의차 방북할 계획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들은 면담 후 한국 정부에 북측과의 고위급 회담에 나설 것을 권고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는 단지 한국 정부의



생각을 듣기 위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 엘더스 소속 인사들은 지난 4월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한 뒤 한국을 찾아 "언제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음.

● 유엔 대북 인권결의 '정치범수용소' 문제제기(11/16)

-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오는 17~18일(뉴욕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이 16일 밝혔다.
- 올해 결의안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9개국이 공동 제안했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4년째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결의안은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또는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의 문제를 지적했음.
- 결의안은 북한 내에 많은 숫자의 정치범 수용소(prison camps)가 존재하고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음.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특히 북한에 억류된 '통영의 딸' 신숙자씨의 남편 오길남씨가 14일 미 의회에서 가족 구출을 호소하는 등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유엔의 이번 조치가 나오는 것이어서 눈길을 끄.
- 결의안은 또 제3국에서 송환되거나 추방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나라는 유엔의 농-르플루망 원칙(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탈북자들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
- 결의안은 긴급한 인도적 우려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것이 유감이라며 상봉이 최대한 빨리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가 식량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할당해 정상적인 생산과 배급이 이뤄지도록 보다 효율적인 식량안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유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음.
-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7년 연속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토의에서 탈북자 관련국들에 '강제송환 금지원칙'의 준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우려를 표했으며, 납북자·국군포로를 포함한 강제 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음.

● OCA, 인천시장 메시지 품고 김정일 위원장 면담(11/16)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메시지를 지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인천시의 한 고위 간부는 16일 "셰이크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 OCA



회장이 오는 20일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송 시장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길 바라는 인천시의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알사바 회장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 알사바 회장은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준비를 점검하기 위한 제3차 OCA 조정위원회 참석차 지난 15일 방한했으며, 같은 날 저녁 송 시장을 만나 아시안게임 준비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음.
- 알사바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선수단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송 시장의 설명에 동의하고, 이 같은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아울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ں 점을 지적하고, 아시안게임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알사바 회장은 평양 방문 기간에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쿠웨이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지난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도왔던 알사바 회장은 17일에는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그리스, 北선박서 화학무기 방호복 1만 여벌 압수"(11/17)

- 그리스 당국이 지난 2009년 9월 시리아 행(行)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에서 화학무기 방호복 약 1만4천벌을 압수했다고 복수의 외교관들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리스는 그러나 이를 1년8개월이 지나서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음.
- 그리스가 화학무기 방호복 압수 사실을 보고했을 당시 유엔 안보리는 핵개발 의혹에 따른 대(對) 북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논의 중이었음.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그리스의 방호복 압수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리스의 작전은 2009년 11월에 시행됐지만, 올해 9월에야 유엔 안보리에 보고됐다"고 전했다.
- 또 다른 외교관은 "당시 북한 선박은 시리아의 라타키아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도 그리스가 안보리에 보고한 내용에는 시리아가 적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외교관은 그러면서 시리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재 위반 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리아는 이미 이란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조치 위반에도 연관돼 있음.
- 한편, 영국의 한 외교관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한 답변에서 "북한이 여전히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고, 한 독일 외교 소식통도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 확산 노력에 대해 안보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외교 소식통들은 그리스의 화학무기 방호복 압수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남북적십자 대표 제네바 회동 가능성"(11/19)

- 남북 적십자사 고위 간부들이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 유중근 대한적십자사총재와 김용현 사무총장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2011년 국제적십자운동 법정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미 현지로 떠난 것으로 알려진 백용호 조선(북한)적십자회(북적)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연스레 만날 수 있을 것으로 한적 측은 보고 있음.
- 한적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북적 관계자와의 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회의에서 자연스레 만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유 총재와 백 부위원장은 회동 성사시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대북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김 사무총장은 올 7월 중국 내이명구(內蒙古) 자치구 어얼뒤스(鄂爾多斯)에서 열린 '동아시아 지역 적십자사 리더십회의'에서 백 부위원장과 만나 북한 식량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백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적 대표단이 세계 186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7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제 내년 시행 추진(11/14)

- 한국과 미국이 양국 여행객들의 출입국 심사 간소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에 나서기로 합의했음.
- 한미 양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같이 의견을 모았음.
- 이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한미 양국에서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trusted traveller)'은 내년 1월부터 출입국 심사관리관의 대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돼 심사시간이 크게 단축됨.
-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이란 지문 및 얼굴 사진과 같은 신체 기록(바이오 데이터)이 등록돼 안전성이 보장된 여행객을 통상 의미함.
- 정부 고위당국자는 "아직 어떤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할지, 신상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해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 미국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모든 회원국들과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일단 한국과 먼저 제도를 운영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李대통령 "한미FTA 발효 3개월 내 ISD재협상"(11/15)**

-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놓고 "국회가 한미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양당 대변인은 덧붙였음.
- 이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의 이날 국회 방문을 통해 이 같은 제안에 따라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해소,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됨.
-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면담에서 이 같은 제안을 받고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를 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기로 했음. 그러나 김진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협상파의 요구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어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 비준안의 핵심 쟁점인 ISD(Investor-State Dispute)는 기업이 상대국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민주당은 ICSID 중재부(3명)의 인적구성상 세계은행 총재를 다수 배출한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 자칫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 원안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일반적인 조항으로, 지금까지 관련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음.
-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는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험난한 길을 헤쳐가려면 국민과 정치·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또 "오늘은 정말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초당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의지를 양당 대표에게 보여주러 왔다"고 강조했다.



● 한미 '기소前 신병인도 호의적 고려' 합의 검토(11/17)

- 한미 양국은 우리 수사당국이 기소 전에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할 경우 미군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합의권고문을 만드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은 오는 23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형진 외교부 북미 국장과 제프리 레밍턴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 양국은 최근 잇따르는 미군 범죄와 관련해 미군 피의자의 기소전 신병인도를 요구하는 한국 내 여론이 대두함에 따라 지난 2001년 개정된 현행 SOFA 규정을 다시 개정하기 보다는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의 형태로 새로운 개선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 양국은 특히 지난 1995년 오키나와 주일미군의 성폭행 사건 이후 미일 양국이 SOFA 운영개선 협의를 통해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 용의자는 기소 전이라도 미군이 일본 경찰에 신병인도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합의한 것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 당국자는 17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피의자의 기소 전 구금인도와 관련해 현행 SOFA 규정상으로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과거 미일 양국의 협의 사례를 준용하면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형사재판권 관련 SOFA 규정 가운데 22조 5항에 따르면 살인·강간·방화·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경찰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합의의사록은 '피의자가 미군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미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특정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인도 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류우의 장관 21일 방중.. 申역할 주문할 듯(11/18)

- 류우의 통일부장관이 최근 미국 방문에 이어 다음 주 초 중국을 방문함.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8일 "류 장관이 오는 2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당·정 고위 인사들을 면담한다"고 밝혔다.
- 류 장관은 방중 기간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 여성으로서의 중국 내 최고위직 인사로 알려진 천즈리(陳志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면담도 예정돼 있음.
- 박 부대변인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중국 측의 이해를



- 돕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등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 측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류 장관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을 면담한다는 점에서 남북 간 대화통로 구축과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됨.
 - 다이 국무위원은 중국 내 외교분야 실무 사령탑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왕 대외연락부장은 북한과 당 대 당 외교를 맡고 있음.
 - 류 장관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진 정비젠(鄭必堅) 국가발전전략연구회장 등 전문가 그룹도 면담할 예정임. 베이징 한인회 간부진과 한국상공인들의 모임인 '북경클럽'을 상대로 한 정책 설명회도 계획돼 있음.

다. 한·일 관계

● 정부, 일본에 '위안부 양자협약' 촉구(11/15)

-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15일 일본 정부에 양자협약을 요구하는 구상서를 다시 전달했음.
-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9월 양자협약 제안에 대해 공식회신을 하지 않아 오늘 정운진 동북아과장이 주한 일본대사관의 참사관을 불러 양자협약을 촉구하는 구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음.
- 외교부는 9월15일 한일청구권 협정 3조(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를 근거로 일본에 양자협약을 공식 제안한 바 있음.
- 이는 1965년 체결한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에 대해 양국 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양자협약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었음.
- 일본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사실상 협의 거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외교문서를 통한 공식 답변은 아직 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일본이 계속 제안을 거부할 경우 수위를 높여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도 반영한 상태임.



● "한국-일본, LNG 공동 조달 논의"(11/19)

- 한국과 일본 양국이 액화천연가스(LNG)의 공동 조달에 나선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오는 28일 도쿄에서 실무자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경제산업상과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은 비공식 협의에서 양국이 LNG를 공동으로 조달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일치를 봤음.
- 구체적으로는 한일 양국의 가스·전력회사가 상대국의 수요 '절정기'에 LNG나 LNG 수입용 선박을 서로 빌려주거나 러시아 극동의 가스전 개발사업에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28일 협의에 한국의 지식경제부 관계자와 일본의 자원에너지청 담당자가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협의함.
- 지난해 LNG 세계 무역량은 약 11조ft³ (1ft³ =약 28.3ℓ)였고, 일본의 수입량은 약 3조ft³ 로 세계 1위, 한국은 약 2조ft³ 로 2위로 양국의 수입량이 세계 전체 무역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함. 주요 LNG 수출국은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임.
- 일본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각 전력 회사가 원전 대신 화력발전 등으로 발전하면서 LNG 구입비용이 불어나 경영을 압박하고 있음.
- 한국도 유럽 금융 위기의 여파로 원화 가치가 떨어져 LNG 조달 비용이 불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LNG 수입대국인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수입 가격을 끌어내린다는 생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라. 한·러 관계

● 주한 러대사 "가스관 연결 위험 담보"(11/15)

-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15일 "북한을 거치는 가스관이기 때문에 우리(러시아)는 관련된 위험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담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브누코프 대사는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상업적 협력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계약서를 맺게 되면 러시아가 2017년부터 가스 공급을 담보한다"며 "상업적 측면에서 꼭 이익이 돼야 가스관 프로젝트 가능하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가스 공급량을 늘릴 것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며 "현재 러시아에서 액화가스가 한국으로 들어오지만 가스관을 통해 가스가 들어오면 소비자 가격을 20~30% 줄일 수 있으니 더 이익이 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브투코프 대사는 또 "가스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3개국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남북과 별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러시아는 철도 연결과 북한을 거치는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 추진도 남북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우리(러시아)는 이것이 남북에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대화 정상화, 북한의 공개화(개방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마. 미·중 관계

● 中, 美의 "규칙 지켜라" 주장 비판(11/15)

- 중국이 무역과 경제관계에서 규칙을 준수하라는 미국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음. 1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의 팡썌(龐森) 국제사(司) 부사장(부국장급)은 13일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종료하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규칙이라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음.
- 팡 부사장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한 국가 또는 일부 국가가 만든 규칙이라면 중국은 지킬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 그의 이런 발언은 APEC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 위안화 평가절상 필요성을 거듭 밝히면서 무역·경제에서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됨.
- 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화가 올 들어 일부 평가절상이 이뤄졌지만, 그 수준이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규칙을 지키기를 바라며 위안화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이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위안화의 평가절상으로 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제품 수출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맞섰음.

● 美-中 '호주미군·남중국해' 신경전 가열(11/16)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에 지역안보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16일부터 시작된 호주방문에서 250명의 미군을 호주에 주둔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아태지역에서의 중국 패권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했고, 중국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호주 본토에 미군 해병250명을 상시 주둔시키고, 미군 전투기와 핵탄재 함정 등이 호주군 시설을 수시로 이용하게 되는 등 양국간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세력 확장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은 이에 못 지 않게 책임도 져야 하며 게임의 법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호주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에



-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미국과 호주 양국 정부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 해병은 내년부터 250명이 호주 북부 다윈 근처에 자리 잡은 로버트슨 해군기지에 상시 주둔하게 됨. 또 2016년까지 모두 2천500명의 미 해병과 공군, 군 관계자들이 6개월씩 순환근무 형식으로 로버트슨 기지에 머물 예정이다.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제 경제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각국이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에서 군사 동맹을 확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음. 류 대변인은 '호주에 군 기지를 설치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을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오바마 미 대통령이 강대해지고 번영하고 안정된 중국을 환영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데 주목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지적했음.
 - 이에 대해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호주와의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해 "진적으로 적절한 조치"라며 중국의 반발을 일축했음. 미 중 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도 거듭 신경전을 벌였음.
 - 벤 로즈 부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해상 안보에 관한 문제는 동남아 국가연합(아세안)에서 논의돼야 할 바람직한 의제"이며 "남중국해는 분명 우려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세안은 국제분쟁 해결의 장은 아니다"며 "그러나 여러 문제에 대처하는 원칙을 마련하는 포럼으로서 해상분쟁 문제는 여러 이슈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리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조종하는 남중국해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관계국 간에 갈등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도한 뒤에 나온 미국 고위 관리의 발언임.
 - 필리핀을 방문중 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모든 국가는 영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위협과 강압을 통해 영유권을 추구할 권리는 없다"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음.
 - 클린턴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를 서필리핀해로 언급하기도 했음. 남중국해 문제를 '핵심이익'에 포함해 온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했음.
 - 중국 외교부의 류 대변인은 "남해(남중국해) 분쟁에 비 당사국,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목청을 높였음.
 - 그는 "남해 문제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의제에 없다"며 "영유권 분쟁을 의제에 올리면 협력과 상호 신뢰 분위기가 깨질 것"이라고 경고했음.
 - 미국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이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논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은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음. 그렇지만 필리핀 등은 남중국해 전체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맞서 '반(反) 중국 남중국해 연대 기구' 출범을 추진 중임.



● 〈中, 인권문제 거론 美하원의원 비자발급 거부〉(11/17)

- 중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서 중국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온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하원의원에 대해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역공에 나섰다.
- 미 의회 내 '중국 문제에 관한 의회-행정부 합동위원회' 위원장인 스미스 의원은 16일(현지시간) 가택연금 중인 인권변호사 면담을 위해 중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됐다고 발표했다고 AP가 전했다.
- 스미스 의원이 방문하려 한 사람은 중국의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칭(陳光誠)으로 4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옥한 2010년부터 고향 산둥(山東)성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음.
- 천 변호사는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으며 산둥성에서 부녀자들에 대한 강제불임 시술과 시기가 늦은 중절수술 강요 등 인구증가 억제책과 관련한 비인간적 행태를 폭로하는 인권 운동을 펼쳐왔음.
- 스미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나와 대표단은 내년 1월 중국 방문을 추진했으나 지난주 중국 대사관 측으로부터 비자발급을 거절당했다"고 발표했다. 스미스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인권소위 위원장으로 '중국 민주화 촉진법'을 발의하고,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의원임.
- 특히 지난 2일에는 중국의 인구증가 억제책인 '한 자녀 정책'에 깊이 관여한 사람을 포함해 각종 인권문제에 연루된 중국 정부 인사들의 미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 법사위 산하 이민정책 및 법집행 소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음.
- 당시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의 입을 막고 국민을 탄압하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스미스 의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그동안 자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그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이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려는 데 역공을 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 이에 대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왕바오둥 대변인은 "비자발급은 주권행위에 속하며 중국의 법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바마-원자바오 위안·남중국해 논의"(11/19)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9일 중국 위안화 환율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 핵심 당국자가 밝혔다.
- 뉴스통신 AP 등 외신에 따르면 두 지도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가진 양자 회동에서 이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톰 도널던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소개했음.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줄곧 저평가됐다고 주장해온 위안화의 평가절상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음.



- 도널던 보좌관은 또 중국이 미국의 개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미국은 항해의 자유, 교역의 자유로운 흐름, 중국과 동남아국가들 간 영유권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음.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남중국해 관련) 영토분쟁이 국제적 규범과 국제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부연했음.
- 도널던 보좌관은 이어 "회동의 핵심 의제는 경제에 관한 것 이었다"며 "좋은 대화(engagement)였다"고 전했음. 그는 또 미·중 갈등에 대한 세간의 이목을 의식한 듯 두 사람이 광범위한 문제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소개하고 EAS 등에서 부각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행보가 중국 견제 차원이라는 시각과 관련, 대통령의 아시아 출장은 "누구를 고립시키거나 봉쇄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부연했음.
- 중국 국영 중국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원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에서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하면서 역으로 미국에 첨단기술 상품 금수 해제 등을 요구했음.
- 원 총리는 "중국은 줄곧 위안화 환율 결정 시스템을 시장화하는 개혁을 진행해 이미 명확한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는 위안화 환율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능동성, 점진성, 통제 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 개혁을 추진해가면서 런민비(人民幣) 환율에 탄성을 부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9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역외선물환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의 절하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위안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고 반박했음. 아울러 원 총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경제협력 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상품 수출 제한을 푸고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서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음.
- 원 총리는 아울러 중국과 미국의 무역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양국이 첨단기술 제조업, 신에너지 산업, 의료·위생 산업,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산업, 인프라 건설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했음.
- 그러나 CCTV는 이날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비록 위안화와 무역 불균형 문제에서 논쟁이 오갔지만 원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원 총리는 "중미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에 도움이 된다"며 "변함없는 자세로 중미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설해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제 경제 정세가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양국 간 경협을 강화해나가는 것은 특수하고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지적했음.
- 발리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동은 사전에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양측은 미·중 관계의 미묘한 맥락을 감안한 탓인지 언론에 회동 초반 일부를 공개할 때도 사진과 영상 취재진만 입장시켰음.
-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EAS 등 최



근 주요 국제회의 계기에 경제·안보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음. 특히 중국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 확대 행보와 남중국해 문제 개입 의지 피력 등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바. 미·일 관계

● 〈美-日 '노다 총리 발언' 놓고 진실게임〉(11/15)

- "노다 총리가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협상 대상으로 다루겠다'고 말한 게 맞다."(미국)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에 정정을 요구하지는 않겠다."(일본)
- 1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한 말을 두고 양국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음.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은 "노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대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고 발표했지만, 일본은 이를 즉각 전면 부인했음.
- 일본은 TPP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의 '관세 철폐 예외'를 노리고 있음. 국내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임. 그런데 백악관 발표대로라면 노다 총리가 막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앞에서는 '농산물도 포함해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 문제를 협상하겠다'고 단소리를 한 셈이 됨. 일본 외무성은 회담 직후 "백악관도 설명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백악관 측의 설명은 달랐음.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의) 발표는 회담 내용이나 노다 정권이 지금까지 표명한 방침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발표를 정정할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일본 측이 목소리를 낮췄음.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5일 오전 회견에서 "미국 측의 설명은 (노다 총리의) 발언 자체를 인용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미국 측에 정정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이래저래 난처한 일본의 입장만 도드라지게 된 셈임.

● 日총리 "美 아태 관여 환영..미일동맹 통해 공헌"(11/19)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폐막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중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미(미일)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공재"라며 "일미동맹을 통해 지역의 평화안정에 공헌하겠다"고 밝혔음.
- 노다 총리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더 깊게 관여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미국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첫 참가를 계기로 정치·안보 대화를 심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음.
- 그는 또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뿐만 아니라 아세안(ASEAN)+3



- (한중일), 아세안+6(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를 토대로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하는데 선두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 노다 총리는 18일에도 동행한 취재진에게 TPP 뿐만 아니라 "아세안+3, 아세안+6의 틀로 경제협력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장래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FTAAP) 창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표명했음. 그는 또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해 "강 건너 불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아시아 경제가 그 충격에 취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국내 문제 중 소비세(부가가치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연내에 결론을 내도록 논의를 심화하겠다"며 "(정부·여당의 결론이) 정리되면 곧바로 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내년 3월) 법안의 국회 제출 시에 각의 결정을 하겠다. 그전에 야당과 진지하게 정책 협의를 하겠다"고 논의 일정을 제시했음.
 -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8월에 각의 결정한 '중기재정 프레임'에 근거해 (2012년도 예산 편성시 부흥채를 제외한) 신규 국채 발행액은 44조엔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말했음. 2011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미임.
 - 한편 노다 총리는 18일 발리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단시간 회담하고, 연내에 방중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중국이 취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음.
 - 원 총리는 노다 총리의 방중에 대해 "내년 중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앞두고 양국관계에 우호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고, 노다 총리는 양국간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심화하겠다고 밝혔음.

사. 미·러 관계

● 美-러, 발리서 비자 간소화 협정 체결(11/19)

- 러시아와 미국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사업가와 관광객에게 3년 복수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자 간소화 협정을 체결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19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 외교대표단은 이날(현지시간)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양국 간 비자 간소화와 관련한 외교각서를 교환하는 형식으로 협정을 체결했음.
- 협정은 상대국을 방문하는 미국과 러시아 사업가 및 관광객들에게 3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하고, 양국 관료들에게는 1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다만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장기 체류할 수는 없도록 했음. 비자 협정은 양국 의회 비준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발효됨.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앞서 7월 미국을 방문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비자 간소화 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과의 비자 간소화 협정 체



결은 이보다 더 중요한 목표인 3개월 무비자 협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미국 사업가 및 관광객들이 3개월 동안 비자없이 자유롭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임. 현재 러시아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남미국가들과 3개월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상태임.

아. 중·일 관계

● "日 노다, 내달 12~13일 중국 방문"(11/16)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다음달 12~13일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이 16일 보도했음.
-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09년 10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총리가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2년 만임. 노다 총리의 방문에 앞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이달 22일과 23일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함.
- 정상회담에서는 동중국해에서의 해상 연락체제 구축, 가스전 공동개발, 내년으로 다가온 수교 40주년의 공동사업 등이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자. 기 타

● <李대통령 "韓中日 지역협력 새로운 단계">(11/19)

-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한국과 중국, 일본의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음. 이 대통령은 이날 발리 아요디아 리조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지난 9월 설립된 한·중·일 협력사무국을 통한 사업이 내실 있고 효율 있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 특히 "올해는 3국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제도화가 진전된 큰 의미 있는 해"라며 "지난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 협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기로 했고, 그래서 3국 협력의 지평이 한층 확대됐다"고 평가했음.
-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3국 협력이 동북아 안정과 세계 경제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사무국을 통해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협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3국 정상회담에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신봉길 초대 사무총장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음.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이번 정상회담을 주관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도 3국간 협력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음. 노다 총리는 지난 5월 이 대통령과 원 총리가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지역을 방



문해 피해자들을 격려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원자력 안전과 재난 분야를 비롯해 3국간 협력 추진으로 유익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감사했음.

- 노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착실히 안정화로 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중요한 이웃 나라인 두 나라에 대해 신속하고도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겠다"고 약속했음.
-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일본이 자연재해를 당한 상황에서도 한·중·일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 대통령, 노다 총리와 공동 관심사인 중대한 문제에 대해 협력·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